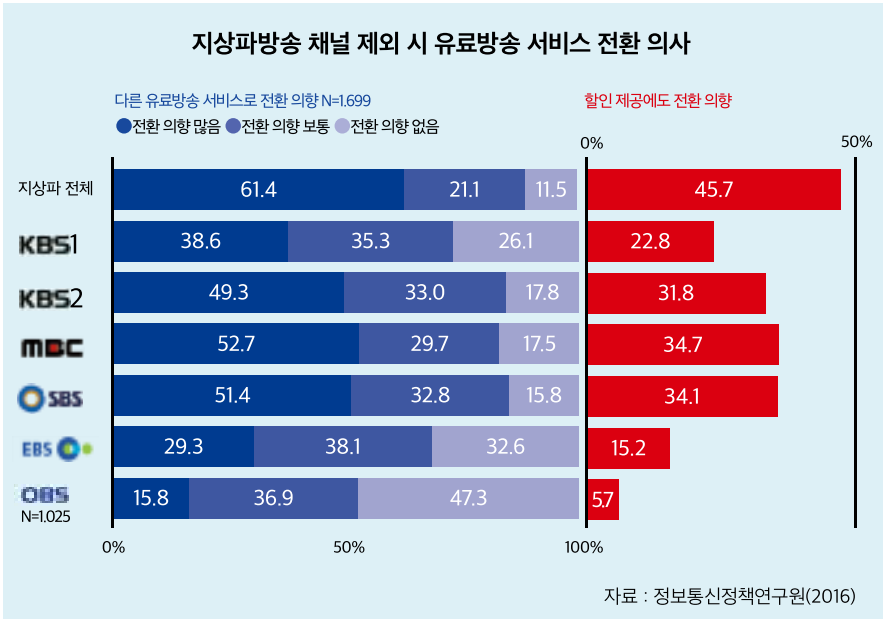


방송기술저널

251호
2017년 4월 12일(수)

10명 중 6명 “지상파 없으면 플랫폼 같아탈 것”

광고주도 “지상파 채널 없으면 광고 삭감할 것”
“지상파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선호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지상파 채널 제외 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

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4월 4일 발표한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방송 이용자의 61.4%가 지상파 채널 제외 시 서비스 전환 의향을 밝혔다. MBC 제외 시 52.7%, SBS 제외 시 51.4%, KBS 2TV 제외 시 49.3%가 플랫폼을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다. KISDI 관계자는 “유료방송 채널이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이들이 공급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절대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상파에 대한 충성도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위의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시청 행태 변화에 따

라 지상파 시청 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유료방송 입장에서 지상파를 여타 유료방송 채널로 대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며 지상파 채널이 필수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였다. 광고주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체가 특정 지상파 채널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현재 해당 지상파 채널에 집행하고 있는 방송 광고 지출액 전체 규모의 8.6%를 삭감하겠다고 응답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는 광고주들이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광고가 도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프로그램 질이 높아져 지상파 프로그램의 협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상파

콘텐츠는 중요하다”며 “유료방송 플랫폼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킬러 콘텐츠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지상파만큼 콘텐츠의 질을 보장하는 곳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종합편성채널과 대규모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등 비지상파 채널의 경쟁력 향상으로 지상파 채널의 필수성 및 협상력 감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KISDI는 “개별 지상파 채널 제외 시 여전히 상당수 가입자는 해당 채널이 편성되는 플랫폼으로 전환 의사를 밝혔으나 전환 의향 자체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지상파 채널의 경쟁력 향상 시 지상파 채널의 영향력 변화가 가능해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4기 방통위원 선임’ 시작부터 패적 황교안 권한대행,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정치권·시민단체 거센 반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6일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으

로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시 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 수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2010년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3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을 맡았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4월 5일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4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식이 된다.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며 김용수 전 미래부 실장의 방통위원 내정을 강행했다. 김 상임위원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4월 7일 입장발표문을 통해 “국민 뜻에 반하는 방통위원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지만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 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방통위원 인사는 탄핵과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고집불통 오기 인사’라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려될만한 행정 공백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조기 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시점에 전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권이 바뀔 후에도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부끄러운 의지를 드러낸 막판 알박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바로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아바타 황교안의 오만방자한 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내정 철회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민정수석실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내정을 강행하도록 압박해 철회 입장을 번복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인사가) 황교안이라는 대리인을 통한 구속된 박근혜 씨의 또 한 번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방통위를 난파선으로 만든 장본인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하여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 번 모독한 황 총리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며 “즉시 김용수 실장의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당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4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 권한대행의 김용수 내정설에 대해 ‘알박기 인사’란 사실을 밝히고 임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적폐 인사를 방통위원에 내정한 것을 규탄하며, 방통위의 즉각 해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며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날 것인지 강제로 끌려나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52호는 5월 10일에 발행됩니다.

KOBA World Media Forum 2017

KOBA WMF 2017

새로운 미디어 경험! (The Next Media Experience!)

일시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14:00~17:30 (3시간 30분)

장소 Coex 컨퍼런스룸 401호

참가비 무료

공식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및 주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KOBA WMF 2017 PROGRAM

Time (min)	Curriculum
2:00 - 2:07 (07)	Opening, Welcoming Address - Jong-Suk Park, Chair, KOBETA
2:07 - 2:15 (08)	Congratulatory Address
[Session I] WMF Speeches	
2:15 - 4:15 (120) 2:15 Speech 1 (40) 2:55 Speech 2 (40) 3:35 Speech 3 (40)	Skip Pizzi, NAB Mark Cousins, AWS Elemental Dillon Suh, Boler Creative
[Session II] Panel Talk : the next media experience beyond UHD	
4:30 - 5:10 (40)	NAB, AWS, Boler Creative, KOBETA
5:10 - 5:20 (10)	Closing and Prize Draw

방통위, 기준 점수 미달한 ‘TV조선’ 재승인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TV조선과 한통속 된 방통위 규탄”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 점수 650점을 넘지 못한 TV조선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3사의 재허가를 승인했다. 방통위는 3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재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승인 유효 기간은 TV조선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채널A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JTBC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다만 TV조선의 경우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

키로 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청 명령, 업무 정지,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JTBC와 채널A는 각각 1,000점 만점 중 731.39점과 661.9점을 획득한 반면 TV조선은 625.1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종편의 재승인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원칙대로 TV조선 재승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인 단체 등이 모인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가 TV조선 단독으로 청문을 실시해 구색을 맞춘 뒤 재승인을 해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방통위는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의 예상대로 3월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이 청문회에서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사업 계획 및 추가 개선 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TV조선에 부과한 조건은 △합리적 광고 시장 전방 및 적극적 판매 전략에 기반한 광고 판매 계획을 수립해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

출할 것 △독립적인 감사인 임명 등 감사 제도 개선, 업무 지침 및 윤리 강령 교육 강화 등 방송 광고 판매의 공정성 확보 개선 계획을 마련해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가 종편 3사의 재허가를 승인하자 바로 방통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TV조선에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및 이행, 보도 편성 비율 축소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인가하는 등 기회를 줬지만 TV조선은 방통위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TV조선은 지난 3년 동안 오보·막말·편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콘텐츠 투자 약속도 두 번이나 어겨 과징금을 맞았다. 또 과징금을 맞고도 행정소송으로 끝수를 부리다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철퇴를 맞기도 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남발한 종편 특혜도 더 이상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TV조선뿐 아니라 TV조선과 한통속이 된 방통위를 규탄하며 앞으로 TV조선 퇴출은 물론, 방통위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이번 TV조선 재승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방통위 해체를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황교안 권한대행,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김용수-김석진-고삼석’ 3인 체제 유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게 3월 2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김 상임위원은 3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3년간 4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의 연임안을 재적 257명 중 21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상임위원은 1984년 MBC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OBS 경인TV 보도국 국장, 이사, 연합뉴스

TV 상무이사와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2년에는 새누리당 공보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월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허원제 현 청와대 정부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돼 남은 임기를 수행했다. 김 상임위원의 연임으로 방통위는 당분간 3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3월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 4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김 상임위원이 연임됐고, 김용수 전 미래부 실장이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인 6월 8일까지는 회의를 열 수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명만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한편 3월 26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재홍 부위원장은 3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한령(限韓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측이 한국의 방송 콘텐츠와 공연을 제한하는 한한령 분위기를 만들더니 최근에는 아예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한 뒤 “이 자리를 빌려 금한령을 내린 중국 당국에 고뇌에 찬 요청을 간곡히 전하고자 한다”며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경제·문화·방송 콘텐츠 등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방송통신 기구는 누구를 위해 개편해야 하나?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 개편안 논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기구 개편안이 발의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 대표는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정책 및 기구 개편’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칭)’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개편안을 발제했다. 강 대표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사업자 간의 경쟁 속에서 소외되고 권리를 훼손당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통신 기구 개편을 주장했다.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2000년 출범했던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민간 기구로 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일부와 수신료산정위원회, 보편적서비스지정위원회, 이용자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다. 이용자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6인, 시청자이용자협의회 추천 3인,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다양한 시민 참여 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쉽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과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취지에는 토론회의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편안이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대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은 “방송위원회를 언급하셨는데 방송위원회의 평가를 보면 ‘행정적 추진력과 실행력이 부족해 무력하다, 책임 없이 격리된 조직이다’ 같은 평가가 있었다”며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실제 방송통신 현장에서 제대로 구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대표는 “미디어 흐름 자체가 거대 사업자에게 수렴되는 구도로 가고 있어 공적 연대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이용자위원회의 필요성을 논한 시작”이라며 “과연 이용자의 참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와 그 밖의 세력 간 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용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표성도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추천 6인 외의 3인은 시청자이용자협의회 추천을 통하는 데, 이 협의회를 어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해야 하는지 과연 그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지역 대표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은 “공동체 라디오, 팟캐스트 등 시민 주체의 미디어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며 이러한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지역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강조점을 부여할 만큼 내용과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함에 대해 인정하면서 가까운 시일에 연대를 강화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성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해결점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개편안의 몇몇 부족한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큼 의견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왜 미디어 정책은 통합돼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두 정권의 공공성 붕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의 발제가 가장 정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발제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이달의 말말말

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상파 UHD 방송 가장 기억에 남아”

3년 임기를 마치고 4월 7일 퇴임식을 가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개시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안착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여러 절차를 걸쳐 5월 31일 시작하게 될 지상파 UHD 방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3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꼽아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한 일을 스스로 말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비를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와 지금은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유통되는 플랫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며 “저기에 맞는 입법을

나름대로 공을 들여 검토했는데 아직 반의반도 못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기관에서 맡아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UHD 방송만 하더라도 그 안에 인터넷망과의 결합이 있는 등 방송통신 융·복합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같이 다뤄야 한다. 또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진흥과 규제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한 것으로 안다”며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용어

EWC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올해 초 구글 딥마인드는 ‘Overcoming catastrophic forgetting in neural networks (신경망의 파괴적 망각을 극복하다)’라는 제목의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뇌에서 신경 세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상호 연결되는 방식을 모방한 신경망(neural networks)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 신경망은 적응하고 학습해 특정 업무를 해결에 최적화하지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면 이를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적응하고 학습한다. 즉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문제에 재사용하는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 ‘파괴적 망각(catastrophic forgetting)’은 머신러닝의 근본적 한계로 여겨져 왔다. 딥마인드의 발표는 이 파괴적 망각을 극복하고 AI의 전이 학습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EWC(Elastic Weight Consolidation)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경망에 특정 업무와 관련된 신경망 간의 연결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정해, 이를 보호하면서 새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을 찾는 형태라고 한다. 딥마인드는 EWC를 통해 파괴적 망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머신러닝을 위한 일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숙희 sh45@kobeta.com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공정한 선거 방송 위해 ‘선거 방송 관련 권고 사항’ 의결·공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20일 오후 3시 방송

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4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안효수 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윤덕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 △이기배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번호사 △안성일 전 MBC 논설위원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안효수 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6월 8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선거에 미치는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권위에 따라 짧은 기간 이뤄지는 초유의 선거로서, 향후 대한민국

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 방송 관련 권고 사항’을 의결·공표했다.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 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으로,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하고 방송사업자들이 선거 방송 관련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속희 sh45@kobeta.com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 3월 20일 발족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때”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3월 20일 발족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 등 87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2017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9대 대선이 지난 수개월 동안 촛불 시민이 외쳤던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고, 언론 현장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2017년 대선 미디어감시연대를 발족한다”고 선언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이번 대선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후보들의 난립과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민주주의 원칙과 유권자 권리에 입각한 정보를 언론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주축 보도를 지양

하고 사실 보도에 충실하 한다 △뚜렷한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정파적 보도 태도를 지양한다 △불편부당, 균형성, 적절성, 비당파성, 공정한 제안 등에 유의하는 한편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선거 정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흑색선전, 황색 저널리즘 등을 지양하고,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요구와 이들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 적극 반영하는 유권자 중심의 대선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발표한 뒤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이후 4월 4일 ‘1차 기자간담회’, 4월 18일 ‘대선 보도 중간 평가 토론회’, 4월 25일 ‘2차 기자간담회’, 5월 2일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5월 25일 ‘대선 보도 총평가 토론회 및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정치권 VS MBC

법원, 자유한국당의 ‘무한도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대표라기보단 국토교통 전문가로 출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야” 반발

무한도전 측 “자유한국당, 걱정이 너무 앞섰다”

우상호 의원 “방송을 제명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행태”

PD연합회 “(자유한국당은)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집단”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을 대상으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자유한국당은 3월 2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대표로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것을 두고 “5개 당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5명을 출연시키는데 놀랍게도 자유한국당 대표로 김현아 의원을 선정했다”며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으나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7번으로 당선이 된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빼앗길까 봐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 선수로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식상 형평성을 맞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른정당 의원 2명이 출연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성 부분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어 “<무한

도전> 제작 담당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에게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방송 전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한도전>은 3월 25일과 28일 공개한 예고편에서 4월 1일 방송되는 ‘국민 내각 특집’ 편을 방송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2017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있었으면 하는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1만여 건에 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아졌다”며 “이 중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은 주제(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를 선정, 국민대표 200명과 해당 주제에 대한 법안 발의가 많고 관심이 높은 국회의원을 선별해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인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채무자 김현아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채권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내린 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의원의 섭외가당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소명도 부족하고, 김 의원의 무한도전 출연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선거 관련 방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우상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3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당 의원이 출연했다고 그러는 것(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정신이나”며 “김 의원이 제명해달라고 할 때는 제명해주지 않고, 김 의원을 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제명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PD연합회도 3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MBC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가? MBC의 편성과 제작을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



©MBC <무한도전> 방송 캡처

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이 4월 1일 방송 예정인 MBC <무한도전>의 ‘국민 내각’ 특집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방송 통제 시도로, 그들이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집단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은다는 취지의 <무한도전>의 ‘국민 내각’ 특집은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획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다”며 “(자유한국당은) MBC가 모처럼 준비한 참신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방송을 방해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위신과 품격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방송 금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무한도전>의 제작진을 비롯한 모든 PD들, 나아가 모든 시청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문재인 “MBC 심하게 무너졌다” VS MBC “공영방송 장악 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MBC, 사측의 성명 그대로 읽는 ‘뉴스 사유화’ 반복”



©MBC 뉴스 방송 캡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MBC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3월 21일 오후 MBC가 주재한 민주당 대선 후보 <100분 토론>에서 “들어오는 길에

해직 기자들이 피케팅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MBC의 현 상황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적폐 청산을 말하고 있는데,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며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주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돼 구속되니 마니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MBC는 어디 갔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해직 기자들의 복직 등 MBC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즉각 반발했다. MBC는 3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문 후보는 민주당이 요청해 편성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MBC가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MBC 비방에 대해 사과하라”

고 요구했다.

MBC는 △해직자 문제는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MBC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한 사실도 없고 △탄핵 다큐멘터리 취소는 편성과 제작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던 제작물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따졌다.

MBC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토론 이후 노조 집행부를 만나 “2012년 대선 때 전원 다 복직시켰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뒤 MBC 보도와 편성에 대해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라고 하고, 탄핵 다큐멘터를 방영을 취소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MBC는 “곧 집권할 수도 있는” 문 후보의 잣대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에 대해 ‘언론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잣대에 미리미리 알아서 기고, 맞추지 않는 언론을 쓸어버리겠다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MBC는 공식 입장 발표에 이어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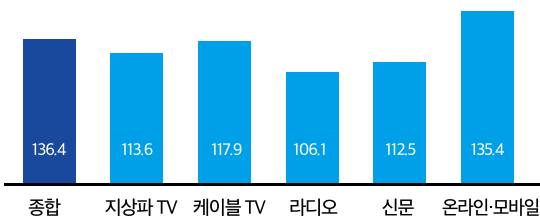
MBC의 사과 요구에 문 전 대표 측이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 경선 캠프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3월 22일 논평을 내고 “MBC가 ‘공영방송 흔들기’라는 비판 뉴스를 내보내며 언론 적폐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눈감았던 MBC가 ‘공영방송 흔들기’라고 나서니 국민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직 기자들의 분노와 눈물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MBC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MBC는 3월 22일 이미 3건의 보도로 문 후보를 맹비난한 뒤 사측의 성명을 기자가 읽어주는 ‘뉴스 사유화’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또 24일과 25일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매일 같이 자사 메인 뉴스에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아무리 자사에 대한 비판을 했더라도 지상파 방송사로서 공정성·공공성의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코바코 “2분기 광고 시장 호조 예상”

KAI 136.4…대부분 업종 상승 커브 그릴 듯



봄철 광고 성수기를 맞아 올해 2분기 광고 시장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국내 광고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는 ‘광고 경기 예측 지수(Korea Advertising Index, KAI)’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KAI는 136.4로 광고주들이 전 매체에 걸쳐 1분기보다 광고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코바코는 “전년에 이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감안하면 광고비 증가폭은 전년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투자 심리 불안감

완화와 신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광고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 TV 113.6, 케이블 TV 117.9, 라디오 106.1, 신문 112.5, 온라인·모바일 135.4로 나타나 조사대상 전 매체가 모두 KAI 100을 넘어, 전 분기 대비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 지수는 ‘가정용품’을 제외한 전 업종이 1분기보다 광고비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파 TV의 경우, 4월 중순 이후 본격화될 프리미엄 스마트폰 광고 마케팅 일정을 반영한 ‘컴퓨터 및 정보통신’ 업종,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음료 및 기호식품’ 업종, 그리고 2분기 신차 출시 일정을 반영한 ‘수송 기기’ 업종의 광고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출판 및 교육’ 업종과 ‘가정용품’ 업종은 감소세를 펼 것으

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중형·소형 광고주 모두 2분기 광고비 증가를 응답했으며, 주요 대기업이 속한 대형 광고주의 매체별 광고 경기 전망에서 지상파 TV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2분기 지상파 TV 광고의 호조가 예상된다.

KAI는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케이블 TV, 인터넷 5대 매체 광고비 합계 기준 500대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웹조사 패널을 구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다음 달 주요 광고 매체별 광고비 증감 여부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해당 업종의 광고주 중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미만인 된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인도네시아 최대 OTT 비디오닷컴, ‘한류 전용 채널’ 신설

4월 시범 서비스 거쳐 5월 본 서비스 개시

인도네시아 최대 동영상 사이트 ‘비디오닷컴’에 한류 전용 채널을 신설하면서 국내 방송 콘텐츠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그룹인 엠텍(Emtek)이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비디오닷컴에 한국 방송 콘텐츠 전용 채널을 열고 4월 한 달간 시범 서비스를 거쳐 5월 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 1인 창작사(MCN) 등 17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채널을 구성해 웹 드라마, 애니메이션, 어린이 교육 등 6천여 편의 VOD를 인도네시아 현지에 제공한다. 특히 현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레저헌터, YGK+, 랜쥘리에듀테인먼트는 독립 채널을 운영한다.

미래부는 일본·중국 등에 편중된 방송 콘텐츠 수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시장 활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의 비디오닷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모델을 확대할 계획으로 드라마·영화 전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movie bay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MNC 그룹, 베트남 국영통신기업(VNPT) 등과도 채널 공급을 협의 중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내 방송 콘텐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채널 진출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는 K-콘텐츠뱅크가 국내 방송 콘텐츠의 수출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승희 sh45@kobeta.com

방송통신 민원 1위는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

“정보 제공 확대와 체크리스트 제공 등으로 불완전 판매 해소해야”

소비자들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위약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월 28일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민원 2,225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및 단말기 제조사, 케이블 TV, 인터넷 TV(IPTV), 위성방송 등 방송통신 관련 민원 2,225건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에 관련 민원은 전체의 23.1%인 515건을 차지했다. 이어 ‘기기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민원이 13.2%인 293건,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관련 민원이 12.8%인 284건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A 씨는 “부득이하게

이민을 가게 돼 해지를 요청했는데 반환금을 40만 원 이상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해외 이민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 이전 설치를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금 없이 해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B 씨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B 씨는 “3년 약정으로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돼 이전 설치를 하게 됐다. 이전 설치를 하는 당일 고객센터 직원이 한 달에 3,000원씩 6개월만 프리미엄 채널을 시청하면 이전 설치비 38,500원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청구서를 보니 평소보다 40,000원 정도의 요금이 더 나왔다”며 “고객센터로 전화해 물어보니 이전 설치비 면제가 안 돼 있었고 항의를 했으나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환불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민원 현황은 LG유플러스가 20.6%인 458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삼성전자 13.6% 302건, KT 11.2% 248건, SK텔레콤 10.4% 231건이 이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양한 요금 체계와 복잡한 단말기 유통 구조, 결합상품 등 이동통신 계약은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된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와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소연 측은 또한 “과도한 해지 방어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 압박 여부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실태는 물론, 위약금 산정 및 부과의 적정성 등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향후 분기별 방송통신 분야 민원 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민원을 통해 드러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소연이 운영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케이블 TV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 발족

지원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2분기 시범 사업부터 적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 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아날로그 종료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협의체는 케이블 TV 아날로그 종료에 대한 자문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시청자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아날로그 종료 시범 사업 개시 시점인 올해 2분기부터 아날로그 종료 승인제 시행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종료 계획 및 추진 상황·결과에 대한 자문, 시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3월 24일 지원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케이블 TV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안)’과 ‘케이블 TV 아날로그 방송 종료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다. 종료 지원 계획은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전환 및 아날로그 송출 중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불편 최소화, 취약 계층 보호, 지상파 시청권 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날로그 종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시범 사업 등의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종료 승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종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아날로그 종료 절차와 종료 추진 시 사업자가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자문을 거쳐 마련한 종료 지원 계획과 종료 가이드라인을 아날로그 종료 시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해 아날로그 종료 준비 사업자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전승희 sh45@kobeta.com

방통위, CJ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 ‘동의’

공익·장애인 복지 채널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3월~4월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해 ‘동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방송·방송·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안), 사업자 신청서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6개사, ㈜티

브로드 계열 9개사, ㈜딜라이브 계열 1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3개사, ㈜씨엠비 계열 2개사, 남인천방송㈜,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재허가 대상 사업자 공통 사항으로 공익·장애인 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6개사 및 ㈜티브로드 계열 9개사에는 지역 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에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전승희 sh45@kobeta.com

관련 기업 및 단체로 구성돼 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개별PP발전연합회 박성호 회장 연임

개별PP발전연합회는 3월 21일 서울 총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박성호 회장(CNTV대표, PP협의회 부회장)의 재연임을 승인했다.

또 신임 부회장으로 한찬수 대표(KMH, PP협의회 이사)를 선임했다. 개별PP발전연합회는 중소PP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1월 결성된 단체로 박 회장은 초대회장부터 연속 4대 회장까지 재연임됐다.

박 회장은 “중소 PP사의 경우 방송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도 대형 사업자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PP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통해 우수한 중소 PP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2년간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KBS 드라마 각시탈, 카메룬 방송국 LTM 통해 4월 말 방송 확정

프레임인아프리카(Frame in Africa)가 카메룬 현지 지상파방송인 LTM 방송사와 현지 프라임 타임(8시~9시) 시간대에 한류 드라마를 2년 동안 방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4월 6일 공식 발표했다.

아프리카와의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적은 있었지만 아프리카 현지 방송사와 상업적 목적의 계약을 통한 한국 드라마의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레임인아프리카 측은 “LTM은 드라마 분야에 강점을 가진 방송사로 현지에서 3위권 정도의 매체 파워를 가진 방송사”라고 설명했다.

4월 24일 LTM을 통해 방송되는 첫 작품은 2012년에 방송됐던 KBS 수목드라마 <각시탈>이다. <각시탈>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맞서 싸운 민족영웅 ‘각시탈’을 그린 작품으로 오랜 식민 경험을 가진 아프리카와 정서적인 공감대가 클 것으로 기대돼 이번 첫 방송물로 선정됐다.

김영동 프레임인아프리카 대표는 “아프리카 현지 에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한류 드라마를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현지 방송사들과 꾸준히 접촉해 왔고 이번 카메룬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케냐, 남아공 등과도 드라마 수출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단신

한국전파진흥협회, 제14대 권영수 회장 선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4월 4일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권 신임 회장은 LG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 경영인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LG유플러스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초고속, 초연결을 지향하는 5G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전파는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사인 산업계의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적극 개진해 전파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RAPA는 1992년 전파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파 방송 산업체 지원, 차세대 방송 및 콘텐츠 제작과 전파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160개 전파방송통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연합회-RAPA,
국산 방송 장비 활성화 위한 MoU 체결
홍보 및 해외 진출 등 국산 방송 장비 육성 위한 교류 협력 약속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회장과 강철희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상근부회장은 3월 15일 서울 목동 RAPA에서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국산 방송 장비 육성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기술 인력 교류 △방송 장비 홍보 및 해외 진출 활동 협력 △인프라 사용 상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산 방송 장비의 육성과 상호 발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3월 9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에서 2017년 1분기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방송 기술인상은 국내 방송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이들에게 매분기별 수여되는 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1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박종화(EBS) △서경원(CBS) △손종수(KBS) △이동환 (광주MBC) △이상희(ubc) △이윤태(KFN) △전태익(YTN) △최준선(아리랑국제방송) △한광만&조영훈(SBS, 공동 수상)

전숙희 sh45@kobeta.com

OBS 노조 “정리해고 시 대주주와 전면전” 경고
추혜선 의원, OBS 천막농성장 방문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가 “정리해고 시 모든 것을 걸고 대주주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OBS 노조는 4월 10일 ‘백성학 회장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리해고는 OBS에 자멸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리해고를 원천 철회하고, 무능한 경영진을 퇴출시켜 조직 혁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OBS 사측은 지난 1월 회사를 위해 퇴직금까지 내놓은 OBS 노조 전임자, 집행부, 대의원 등 총 11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2월에는 직원 19명에게 자택 대기 발령 및 출근 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3월 14일 18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같은 날 오후에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OBS 노조는 “백성학 회장이 주도하는 이번 정리해

고는 명백한 부당 해고일 뿐 아니라 ‘대업 경영’의 책임을 오로지 노조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OBS 사측은 “OBS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은 2013년 281억을 정점으로 2014년·2015년 251억 내외, 2016년 218억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하락이 이어졌으며 급기야 2017년의 예상 광고 수익은 전년대비 무려 38억이 급감한 18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회사의 구조조정은 뼈와 살을 쥐고 베어내는 아픔”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몇 년째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OBS의 광고 매출도 줄어들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OBS는 별다른 사업 확장 없이 매년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재무제표에 따르면 OBS

는 2012년 56억 원, 2013년 16억 원, 2014년 14억 원, 2015년 6억 원의 수익을 냈다.

김경률 회계사는 앞선 토론회에서 “OBS가 개국 1년 만인 2008년 12월 31일에 경영 위기를 선언하면서 비상 경영안을 내놓았는데 2010년 OBS의 부채 비율을 보면 13%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2015년 말 OBS의 방송 기계 기구·방송 시설 장부가액은 각각 4억 2,800만 원과 400만 원, 방송 시설 등 투자액은 2012년 5억, 2013년 1억, 2014년 3,000만 원, 2015년 1억으로 절대액이 작을 뿐 아니라 감가상각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투자도 하지 않고 매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기 상황이나”고 의문을 표했다.

OBS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억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CPS 등 수익 사업을 방치하고, 자체 제작은 포기하는 등 수익을 내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오로지 사람을 자르겠다는 목적만이 OBS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3월 28일 오후 6시경 OBS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형장을 방문해 무엇보다 백성학 회장의 사업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OBS에 대한 재하가를 조건부로 승인할 당시에도 추 의원이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자 감소나 인력 감축 등 방송의 물적 토대를 더 취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OBS 상황이 딱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등으로 역량 있는 방송인들을 내쫓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이날 농성장을 찾아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면서 지역 방송으로서 OBS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OBS 노동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추 의원은 “백성학 회장이 의지를 갖고 방통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박주민 의원 ‘수신료와 전기 요금 분리 고지’ 법안 발의
“시청자의 방송 및 수신료 납부 선택권 보장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시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4월 3일 발의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수신료 전기 요금 분리 고지 요구가 이번에는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1994년 이후 KBS는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받은 한전은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총액을 고지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인식 없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 비율은 약 98%에 이른다.

이 때문에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해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해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재판부는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해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란 이미 확정된 수신료 납부 방식을 변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담에 불과하다”며 “불이익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수신료는 법적으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지녔다”며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결합해서 징수할 경우 징수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신료 납부

수치도 증가하는 등 공영방송 시행을 위한 경비 조달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함으로써 생기는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청구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수신료를 분리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은 소비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시청 거부와 그에 따른 수신료 납부 거부까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제도로는 수신료 환불도 어렵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신료에 대한 민원 중 TV 미소지자에 대한 부당 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가 2012년 이후 매년 9만여 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신료가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돼 있어 수신료 징수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TV 미소지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불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수신료 부과와 환불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현재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기간이 자신의 고유 업무와 결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전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전기 요금 납부 고지와 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수신료 납부 고지를 결합해 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전기 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분리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시청자의 방송 및 수신료 납부 선택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자진 사임

고삼석 상임위원 “자진 사임이든, 해임이든 그 기록과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언론노조 “해임으로 기록해야 하고,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해”

채용 비리, 계약 비리, 공공 유용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3월 21일 자진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재단 간부회의를 소집해 “저와 재단에 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 등의 사실 관계 진위와 사안 경중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하리라 본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건의안을 반려했지만 재단을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5월 임명 당시부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정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이사장의 비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방통위는 당사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대신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해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신입 사원 및 파견직 채용 비리, 계약 비리, 관용 차량 및 운영비 사적 유용 등 온갖 유형의 부정행위에 얽혀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재단 실무 담당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이사장 지시 한 마디에 불법 비위 행위는 상습적으로 반복됐다”며 “방통위가 작성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이 이사장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위해 재단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특별임시이사회의는 3월 7일 “이 이사장이 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해임 처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반려했다.

사실 최 위원장이 이석우 이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었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도 3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면권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해임이 아니라 ‘의원전직’으로 (이 이사장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전문성 없는 친박 낙하산 인사를 시민사회와 언론운동단체들의 반대에도 임명 강행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을 불법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짊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사장은 해임이 아닌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았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진 사임이든, 해임이든 그 기록과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마지막 배려를 이석우 씨가 악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면죄부로 해석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자진 사퇴가 해임건의안 반려의 조건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국민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행태이자 정부·공공 기관의 인사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무책임 행정”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고 친인척과 지인들로 공공 기관 채용을 농단한 자에 대해선 해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하고, 그가 재직 중 저지른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기획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분석

지상파 광고 매출 감소세 지속

“유료방송 채널의 광고 단가 지상파 상회해”
“종편의 비정상적인 협찬 매출 증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지상파3사의 시급별 광고 요금 수준(2016년) (단위:천원)

채널	SA급		A급		B급		C급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KBS2	9,075	15,300	2,790	11,145	1,500	11,100	735	7,905
MBC	8,160	13,605	3,469	13,050	1,149	12,698	780	7,905
SBS	9,180	13,500	2,370	12,105	1,530	11,700	885	4,950

<주: 15초 프로그램 전후 광고 요금 기준> 자료: KOBACO, 미디어크리에이트 제출 자료

종합편성채널의 시급별 광고 요금 수준(2016년) (단위:천원)

채널	SA급		A급		B급		C급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JTBC	4,264	8,762	1,082	4,264	886	6,236	346	886
MBN	1,400	4,000	1,000	4,000	350	1,200	350	350
TV조선	3,300	7,820	2,850	5,400	600	3,300	600	3,300
채널A	-	7,400	2,500	7,400	1,300	2,500	500	2,500

<주: 15초 프로그램 전후 광고 요금 기준> 자료: 2016년 6월 기준 각 사 홈페이지

주요 유료방송채널의 광고 요금 최고가(2016년 6월기준) (단위:천원)

채널	프로그램명	전후 CM	중간 CM
JTBC	옥씨남정기	8,762	10,275
MBN	동치미, 아궁이, 황금알 등	4,000	6,000
TV조선	호박씨, 애정통일, 남남북녀 등	7,820	11,730
채널A	-	7,400	11,100
tvN	나영석블록	10,000	25,000
OCN	동네의 영웅	3,000	7,500
Mnet	슈퍼스타K8	6,000	15,000

1)15초 프로그램 전후 중간 광고 요금 기준

2)최고가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명을 수록, 최고 시급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시급대의 프로그램들을 수록함, 채널A는 단가만 알 수 있어 프로그램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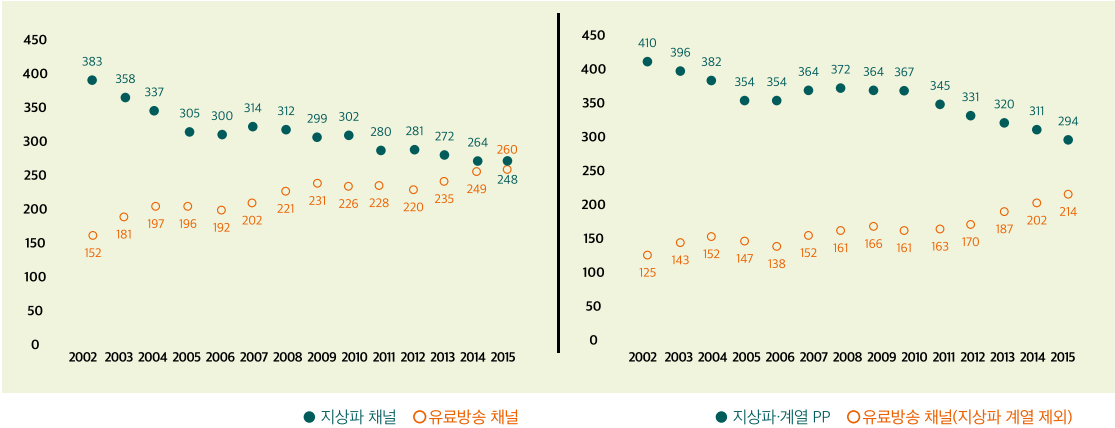
자료: 각 PP 홈페이지 및 사업자 제출 자료(CJ E&M), 2016년 6월 기준

케이블 260분 VS 지상파 248분 ...케이블 ‘시청 시간’ 지상파 앞섰다

“종편 등의 시청 시간 증가로 비지상파 계열 지상파 역전”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 추이(가구)

(단위:분)



비지상파 시청 시간이 지상파 시청 시간을 넘어섰다.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지상파 채널 시청 시간은 260분으로 248분인 지상파 채널 시청 시간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KISDI는 “지상파 및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청 시간 기준 점유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채널 등의 시청 시간 증가로 비지상파 계열 유료방송 채널의 시청 시간 기준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가구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은 508분이었으며, 그중 지상파 채널 시청 시간은 248분으로 전년 대비 16분 감소한 반면 비지상파 채널 시청

시간은 260분으로 전년 대비 11분 증가했다.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유료 채널 시청 시간은 294분으로 전년 대비 17분 감소했고, 비지상파 계열 유료 채널 시청 시간은 214분으로 전년 대비 12분 증가했으나 여전히 지상파 계열 PP의 시청 시간이 비지상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지상파 계열 PP에는 KBS, MBC, SBS, EBS(EBS플러스1/플러스2, EBS English), OBS(OBS W)계열 PP를 모두 포함

2)유료방송 채널 시청 시간은 지상파 채널을 제외한 채널들의 시청 시간 합으로 계산

3)유료방송 채널 시청 기간에 홈쇼핑 PP의 시청 시간 제외

자료: 닐슨컴퍼니코리아

OTT가 유료방송을 대체할 수 있을까?

KISDI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대체할 수도 있어” 가능성 언급

지난해 국내에 진출했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차잔 속 대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 OTT)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송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2016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과의 대체재라기보다는 보완재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나 설문 조사 결과 유료 사용자 46.2%가 OTT 서비스의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가입자 방송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KISDI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료 방송 서비스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서 OTT 동영상 서비스 유료 사용자가 무료 사용자에 비해 유

료방송에 가입한 경우의 수가 많았다. KISDI 관계자는 “유료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유료방송 가입률이 낮을 경우 OTT가 기존 유료방송 대체재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나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은 OTT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과의 대체재라기보다 보완재 형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른 방송이나 통신 상품과 결합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결합 상품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OTT 동영상 서비스가 방송이나 통신 고객들의 이탈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SK텔레콤 고객센터 박 모 씨는 SK텔레콤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다. 박씨는 “고가격대의 시그니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신 영화나 TV 예능 프로그램 등을 옥수수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ISDI 관계자는 “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독립 OTT 동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들에게 OTT 서비스의 유료방송 대체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료 사용자(46.2%)가 무료 사용자(19.9%)에 비해 ‘기존 방송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방송을 위협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tvN이 성장한 것처럼 넷플릭스가 한국 자체 제작 콘텐츠 수를 늘려가기 시작한다면 2~3년 후에 방송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위상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과의 합작 영화(옥자)를 올해 개봉할 예정이며, 천계영 작가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을 드라마로 제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tvN 드라마 <시그널>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와도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19세부터 59세까지 총 1,04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23일까지의 기간 중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최소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할당해 실시했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며

칼럼



호요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까지 몸에 밴 구태의연한 관습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예전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식사와 선물을 포함한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제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부정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관례가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게 정의돼 있어서 적용 대상자의 차별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다.

2~3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우리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혁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법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아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의 기본의식이 올바르게 정착돼 있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속의 내용보다는 겉의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타의 다른 선진국보다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밀조밀 부딪치며 살아가다 보니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빠르게 앞서가려는 치열한 경쟁의식 때문에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삶을 즐길 여유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럿이 식사를 할 때 각자 내기를 하지 않고 상사나 초청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각자 내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모임에서는 안전에 대한 회의를 마친 뒤에 식사를 같이하고 나온 음식값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불한다. 이런 경우에 각자 부담하는 음식값은 혼자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여차피 총액의 1/N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많이 먹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알박한 계산에서 각자 먹고 싶은 것은 모두 주문해 싣것 포

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 사람들은 함께 회식을 하고 나서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각자 계산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음식값이 비싼 경우에는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조절해 주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너무 쪼잔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 능력껏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인지, 행사 등록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많이 먹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용 계약에 대한 개념이 다소 약한 것 같다. 미국인들은 고용 계약을 맺으면 이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엄격히 지키면서 개인적인 전화는 물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삼가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매진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급할 때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평소에는 다소 풀어져서 약간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외국 회사에서 일할 때, 부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의 시간을 확인해 모임 일정과 시간을 잡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었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회의를 짜임새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꼼꼼히 점검해 회의를 성실히 준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상사가 자기에게 편한 시간을 임의로 잡아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시작하는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끝나는 시간은 아예 알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회의와 관련이 적은 잡담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많으며, 본업에 투입할 시간을 빼앗겨 결국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까지 몸에 밴 구태의연한 관습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사설

방통위의 재허가 승인 및 관리 감독 업무는 공정한가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3사의 재허가를 승인했다. 이를 두고 방송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종편의 경우 신설 허가 단계부터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재허가 건을 계기로 다시금 그 본질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건부로 재승인이 됐으며,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업무 정지,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점수 미달의 방송사에 재승인 요건을 달아 재허가를 주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종편의 재승인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원칙대로 재승인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TV조선은 지난 3년 동안 오보 및 편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비상국회의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남발한 종편 특혜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TV조선과 한통속이 된 방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방통위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선언했다.

방통위가 TV조선에 부과한 조건은 △합리적 광고 판매 계획 수립 및 제출 △독립적인 감사 임명 등 감사 제도 개선, 업무 지침 및 윤리 강령 교육 강화 계획 등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등으로 알려졌다. 방송의 공정성 및 사회의 공기관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위의 조건들은 방송 경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조건부 재허가는 더욱 신중해야만 했다. 단순한 바주기 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금번의 사태의 심각성은 설립 허가 때부터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종편의 재승인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종편 특혜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방발기금 면제 및 징수 유예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종편이 기금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근 몇 년간 종편, 케이블TV의 광고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UHD 방송 개시를 위해 전문화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지상파 등의 전통적인 매체는 방송 광고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지에서 지속해서 주장해 온 지상파 중간 광고 시행을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방송 매체의 역사별적 특혜를 중단하고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2017년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직군별 특성화 교육

미래방송기술 창의인력 양성사업

교육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교육비 무료(중식을 제외한 기타 숙식비는 각 사 자체 부담)

교육 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접수 일정 매월 접수,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교육 접수 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 필수

(무단 지각 및 결석 시 추후 교육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문의

TEL 02-3219-5640~1 / FAX : 02-2647-6813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홈페이지 edu.kobeta.com

E-mail bea@kobeta.com

구분	교육과정명	목표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대상
UHD 전문가 양성과정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1차)	20	6.21-6.23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지상파방송 기술인
	UHD 제작 워크플로우 실무(2차)	20	9.20-9.22		
	UHD 송신 시스템	20	7.18-7.20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남산 송신소	
	UHD 후반 작업과 색재현	20	8.16-8.18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오디오&조명 전문가 양성과정	방송조명 제작 워크플로우 실습	10	6.13-6.15	미정	
	오디오 Mixing&Mastering 실습	10	8.22-8.24	미정	
방송 시스템 전문가 양성과정	네트워크 및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20	11.07-11.10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차세대 라디오 및 모바일 방송	15	10.18-10.20		
	디지털 신호 시스템 품질 관리	15	7.04-7.06		
지역 방송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경남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5	4.19	KBS창원총국	
	제주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5	6.29	미정	
	강원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0	8.30		
	전북권 지역방송기술세미나	20	10.24		
글로벌 방송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글로벌 방송제작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5	7.14-7.19	일본, 도쿄	
	글로벌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	5	9.12-9.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 센터	
세미나 및 컨퍼런스	KOBA World Media Forum	-	5.16	Coex 401호 컨퍼런스룸	지상파방송기술인 예비 방송기술인 일반인
	KOBA Conference (Pre-Engineer)	-	5.17	Coex 컨퍼런스룸	
	KOC 2017	-	미정	미정	
	UHD 방송기술 세미나 (UHD 방송의 쟁점과 전망)	-	5.24(예정)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 위 교육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edu.kobeta.com)를 참고 바랍니다.

KOBA 2017
www.kobashow.com



27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7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7.05.16-19 | COEX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